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메커니즘과 일대일로 구상

히라카와 히토시*

I. 서론	IV.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선(沿線)국가
II. 동아시아경제의 발전과 직접투자	V.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위기
III. 세계경제 속에서 성장하는 동아시아 및 중국	VI.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일대일로와 세계경제 전망

■ 국문초록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코로나19(COVID-19)는 2020년 3월 이후, 인근 아시아 국가로부터 유럽, 미국으로까지 심지어는 신흥국가로까지 순식간에 확산되어 역사적인 세계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고 생산네트워크가 끊어졌으며 또 소비가 사라짐으로서 과거 수십 년 동안에 걸쳐 가속되어왔던 경제의 세계화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의 세계화는 아시아,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을 초래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독자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미국은 중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2017년에 탄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7월 이후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양국은 무역전쟁에 돌입하였다. 이

* 平川均. 중국 저장웨슈외국어학원(浙江越秀外國語學院) 특임교수·일본 나고야대학(名古屋大學) 명예교수. e-mail: hhirakaw@gmail.com.

한국어 번역을 담당해준 박만봉씨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그리고 익명의 3명의 심사위원은 귀중한 코멘트를 해주셔서 논문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린다.

무역전쟁은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문제에서 미국의 안전보장 위협에 관한 기술패권 문제로 그 성격을 바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채택한 대중 정책은 관세정책을 통해 국제무역에 큰 장벽을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중국 ICT 기업의 제거를 목표로 삼고 있어서 1990년대 이후 가속화해 온 경제의 세계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덮친 것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둘러쳐져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는 미·중의 패권 전쟁에 더하여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서도 큰 수정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인식 아래, 먼저 중국에 발전을 가져다주었던 지난 반세기에 걸친 아시아의 발전 메커니즘을 확인한다. 이어서 중국의 대외정책으로서의 일대일로 구상의 특징과 과제를 논한 다음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전염병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일대일로와 세계경제구조의 변화를 전망한다.

주제어 : 동아시아경제, 중국경제발전, 미·중 무역전쟁, 일대일로, 코로나19

■ Abstract

The Mechanism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in the Global Economy

Hirakawa Hitoshi

(Zhejiang Yuexiu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Nagoya University)

The novel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 (COVID-19) that broke out in Wuhan, China at the end of 2019 has spread from neighboring Asian countries to Europea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emerging countries since March 2020.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which has accelerated over the last few decades, now faces historic crises due to constriction on people's mobility, severance of production networks, and loss of consumption. Incidentally, globalization has brought economic development to Asia and especially China. China now reigns as the second-largest economy globally and has launched its own hegemonic foreign policy, which poses a growing threat to the United States. To counter the threat, since July 2018, U.S. President Trump (who took office in 2017) has imposed additional tariffs on imports from China, which has led to a trade war. The two countries have waged this war with policy strategies that extend from reducing the US trade deficit to those restricting and regulating

technology in ways that infringe on America's national security.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s tariff policies toward China create barriers to international trade and aim to remove the US from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of Chinese ICT companies. These policies also seriously threaten the global acceleration of economic globalization that has continued since the 1990s.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further exacerbates the situation. Currently, the China-centric global production network needs significant changes to cope with infectious diseases and finds itself caught between the US and China in a hegemonic war. Within this backdrop, we confirm the developmental mechanisms of Asia that have led to China's development over the past half-century. It then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of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s China's foreign policy and examines the impact on China and the country's responses to both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COVID-19 pandemic. Lastly, it explores prospects for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global after COVID-19.

Key-words : Economy of East Asia, China's Economic Development, US-China Trade War, One Belt One Road, COVID-19

I. 서론

2019년 말 중국 우한(武漢)에서 집단 발생했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엄습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인정했던 2020년 3월 11일 이후, 인근 아시아 여러 나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결국에는 전 세계로 극적으로 확대되어 5월에는 개발도상지역에서의 감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6월 22일 현재, 세계 188개국에서 누적감염자 900만 명, 사망자 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중 미국 감염자 수는 228만 명, 사망자 12만 명을 헤아리며 3월 하순 이후 세계 최대 감염국인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기존의 세계 질서가 다양한 도전에 노출되어 있다. 2017년 1월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했고, 2018년 3월부터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무역전쟁은 2020년 1월에 ‘1단계 합의’를 보았으나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2016년 6월에 있었던 국민투표에서 시작된 영국의 EU탈퇴문제(Brexit)도 2020년 1월 말에 최종 마무리되었지만, 향후의 불확실성을 지울 수는 없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1990년 이후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어온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며 거부이다. 여기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이하 코로나19 위기)가 덮쳤다. 팬데믹이라는 비상사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걸쳐 있는 생산 네트워크의 가치 사슬(value chain)의 단절을 강요하고 있다.

눈앞의 위기는 반드시 종식될 것이다. 그때 아시아경제는 어떻게 되어 있겠는가? 코로나 위기는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2차, 3차 유행과 나아가 미지의 감염증 내습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셔널리즘이 복권되며 경제효율의 과도한 추구가 부정되고 경제는 국경이라는 틀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도 코로나19 위기도 하나가 되어 과제를 들이밀고 있다. 지난 반세기 이상에 걸쳐왔던 경

제의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재검토 및 기업 네트워크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과제를 염두에 두면서 아시아경제의 지난 반세기에 걸친 발전 구조를 기업의 국제 전개와 혁신(innovation)에 초점을 맞춰서 고찰하고, 향후 아시아경제, 특히 중국경제의 전망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동아시아경제의 발전과 직접투자

1. 동아시아경제의 발전

동아시아 개발도상경제의 성장은 1960년대 신흥공업경제군(NIES)의 발전에서 시작했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처음에는 NICs(OECD, 1979), 그 뒤 NIES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들 국가-지역은 저임금을 기초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시장을 해외에 둔 수출주도형 정책을 택했다. 간단명료하게 말하자면 주로 일본기업의 자회사가 이 수출에서 큰 역할을 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의 급격한 대(對) 달러 엔화 환율 상승에 따라 일본기업이 NIES에서 ASEAN국가로, 1990년대에는 개방정책을 채택한 중국, 그리고 베트남을 필두로 하는 후발 ASEAN국가로 투자처를 확대하여 갔다. 뿐만 아니라 NIES에서 탄생한 기업도 일본의 뒤를 따라서 아시아 투자를 진행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발전을 바탕으로 1993년에는 세계은행이 NIES와 ASEAN국가에 확산되던 고도성장경제를 고실적아시아경제(HPAEs)라고 명명한 보고서 『동아시아의 기적』을 발표했다(World Bank, 1993). 리포트의 특징으로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주목한다. 하나는 세계은행이 HPAEs의 고성장을 동아시아 문화와 제도의 특수성에 연관을 지어서

성장에 기여한 정부(공공 정책)의 역할을 공인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경제 격차 축소 및 빈곤 감소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은 세계은행이 NIES, ASEAN에 중국을 포함한 지역을 ‘동아시아’라고 개념화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는 그때까지 일본, 대한민국, 중국, 내몽고, 대만, 홍콩특별행정구를 가리키는 지역 개념이었다. 그것이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지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2. 동아시아 발전과 직접 투자

주류경제학은 이 경제성장을 각국의 개방화 정책의 결과로서 설명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해외직접투자(FDI)의 역할이다. 피터 드러커는 1997년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국제무역이론에서는 투자가 무역을 뒤따른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무역이 점점 투자를 뒤따른다. 재화의 국제이동보다는 오히려 자본의 국제이동이 세계 경제의 엔진이 되고 있다(Drucker. 1997, 166).” 한국의 경제학자 김영호는 동아시아의 공업화 배경에 선진국 기업의 ‘자본·기술집약적 투자’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역(逆)루이스적 모형’이라고 불렀다. W. A. 루이스는 아프리카의 저개발 원인을 ‘노동의 무한공급’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김영호는 동아시아 공업화의 기저에 외국기업의 대량 유입, 즉 ‘외자의 무한공급’을 본 것이다(金泳鎬. 1988, 60).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흥국 발전을 역사적으로 파악해보면 외국자본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20세기 신흥국의 개발방식을 크게 구분하자면 (a)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b) 수입대체형 개발정책, (c) 수출주도형 개발정책일 것이다. 이 가운데 (c) 이외의 성공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FDI를 유치하여 수출주도형 정책을 선택한 신흥국만이 성공한 것이다(平川均. 1997).

동아시아의 성장 또는 발전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FDI, 즉 기업의 전략적인 해외전개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FDI의 도입정책을 1960년대에 남보다 빨리 채택한 곳이 아시아 NIES였다. NIES는 개발 초기부터 수출가공구, 무역특구, 자유무역지구 등으로 불리는 특별 행정구를 설치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회사를 유치했다. NIES는 주로 일본에서 자본재, 중간재를 수입했고 생산된 제품은 주로 미국 시장에 수출했다. 이 성장구조는 ‘성장의 트라이앵글’이라 불렸다. 1980년대에서 90년대가 되면 이 성장 메커니즘에 ASEAN, 중국 등이 참가하여 고도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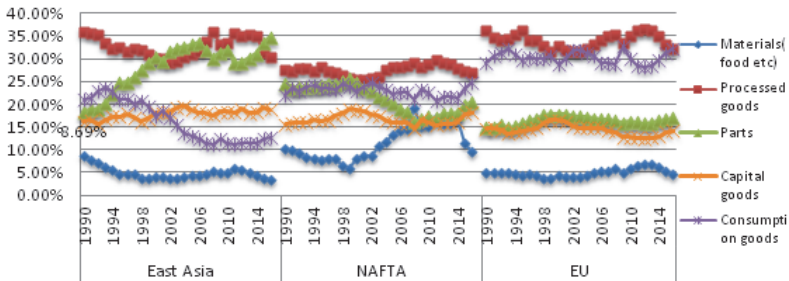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기업의 FDI 붐에 NIES의 지역 기업들이 참가하여 동아시아 역내투자가 확대되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1983~89년 사이에 세계 FDI의 증가율은 연평균 29%에 달했는데, 그 신장률은 세계 수출 신장률의 3배, 세계 GDP 신장률의 4배에 달했다. 그 투자가 동아시아로 향했다. 개발도상지역으로 향했던 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비율은 1984년 30%에서 1990년에는 65%로 두 배 증가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이것을 두고 비교우위에 응하여 선진국에서 후발국으로 산업이 이전하는 이른바 ‘안행형(雁行型)’ 메커니즘이 작동했다고 설명한다(ADB. 1992, 63). 1990년 개발도상지역에서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FDI 유치 점유율은 한국과 싱가포르만으로도 19%, 중국이 12%, ASEAN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이 24%, 기타 아시아가 10%였다(ADB. 1992, 66).

트라이앵글 구조의 고도화는 역내무역의 재화별 구성을 변화시켰다. 동아시아의 역내무역에서는 1990년대 이후, NAFTA 및 EU와 대조적으로 부품거래가 급증했다. <그림1>은 세계의 주요 경제권에서의 역내무역 재화별 구성(1990~2014년)을 보여주는 것인데 부품무역은 EU가 17% 전후의 추이를 보이고 NAFTA도 약 25%에서 21세기 들어서면서 20% 이하

■ —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메커니즘과 일대일로 구상 ■ 히라카와 히토시

로 크게 줄어든 데 비해 동아시아는 18%에서 35% 가까이 배증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역내무역은 약 2/3가 중간재 무역이며 유기적인 역내 분업구조를 통해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1> 주요 경제권별, 재화별 역내무역의 변화(199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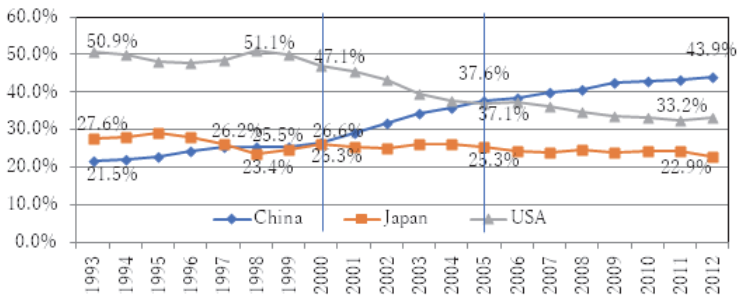
출처: RIETI-TID 데이터에서 필자 작성(검색일: 2019.1.23). 정의는 경제산업성 『通商白書』에 기초하여 적용했음.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상대국별 구성도 크게 바뀌었다. <그림2>와 같이 21세기 초까지 동아시아의 최대 무역 상대국은 미국, 그 뒤를 이어 일본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양국의 관계는 역전되었다. 동아시아는 중국을 축으로, 이어서 미국과 일본이 뒤를 따른다. 동아시아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이 강화되면서 대체로 중간재의 역내무역을 통해 완제품, 최종재를 주로 중국에서 생산하고 그것이 미국, EU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최종재가 역내에 만들어진 소비시장에 공급되게 되었다.

실제로 동아시아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세계은행 보고서는 동아시아의 성장을 ‘공유형 성장(Shared growth)’이라고 불렀는데(World Bank. 1993) 동아시아에서는 격차 축소와 빈곤 감소로 신중산층이 탄생하면서 글로벌한 소비(middle-class consumption) 구조를 크

게 바뀌게 됐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1965년 세계 총 중산층 소비에서 차지하는 국가·지역별 점유율은 미국이 37%, EU가 34%, 일본이 5%로 합계 77%였다. 그것이 2011년에는 미국 20%, EU 26%, 일본만 약간 증가해 8%로 나타났지만, 중국이 5%, 인도가 2%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이 2030년을 예상해보면 EU 14%, 미국 9%, 일본 4%로 합계는 27%로 반감된다. 대조적으로 중국 17%, 인도 18%로 점유율을 높이면서 이 2개국만으로 선진 세 경제의 시장 규모를 훨씬 웃돌았다. 중국과 인도 등의 평균 소비 수준은 선진경제의 절반 이하이지만, 2개국은 인구 규모 덕분에 세계 총 중산층 소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에서도 중산층이 선진경제에 가까워지면서 소비를 확대했다(OECD, 2017, 14).

<그림2> 동아시아의 대미국, 일본, 중국 무역의 비율 추이



출처: UN Comtrade;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2012; Custom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 Taiwan에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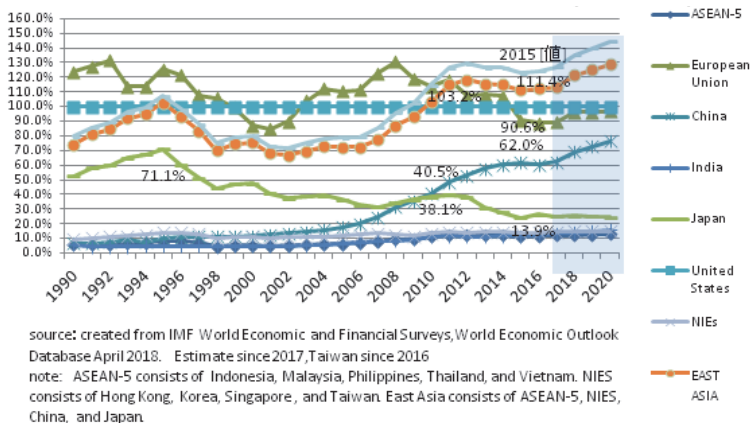
주: 대상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중국, 홍콩 9개국·지역. 대만 이외의 자료는 UN Comtrade. 대만의 자료는 2013년만 Custom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 그 나머지는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2012에 의거했다. 베트남의 자료는 2000년 이후 뿐이다. 2000년의 대일 점유율은 26.3%, 대중 점유율은 26.6%이다.

III. 세계경제 속에서 성장하는 동아시아 및 중국

1. 변화하는 세계와 아시아의 경제구조

동아시아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다. <그림3>은 미국을 100으로 삼고 주요 지역·국가의 경제 규모 지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첫째, 동아시아는 1990년대 후반에 침체되었지만 그 뒤 착실히 미국을 추격하여 21세기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 되었다. 현재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1.3배, 인도까지 더하면 1.5배에 근접하고 있다. 2010년은 두 가지 의미에서 ‘신기원(epoch)’이다. 하나는 아시아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과 중국의 규모가 역전된 것이다. 동아시아경제에서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주도국이 대체되었고, 세계경제와 아시아경제의 관계에서 극적인 구조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 국한되던 중국은 이제 미국에 도전하는 경제 대국으로 인식되게 된다.

<그림3> 미국을 기준으로 한 세계 주요 국가·지역의 지수변화(1990~2020년)



동아시아의 발전과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단순히 동아시아 개별 국민경제의 성공 결과로 파악해버리면 간과하는 것이 생긴다. NIES에서 ASEAN, 중국으로 성장의 극(極)이 전환되는 가운데 발전 메커니즘이 고도화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이 아시아의 발전은 각국이 개방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비교우위가 다른 국가군(일본, NIES, ASEAN)이 차례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채택해 생산과 수출구조를 고도화시킴으로써 실현됐다고 설명된다(渡辺, 1991 ; Bradford & Branson, 1987). 또한, 아카마츠 카나메(赤松要)가 ‘안행(雁行) 형태형’ 발전으로서 일본의 산업화에서 발견했던 패턴이 동아시아에서 실현된 것이라고도 하였고¹⁾, 후발국의 따라잡기(catchup) 산업화로도 설명되었다(末廣昭,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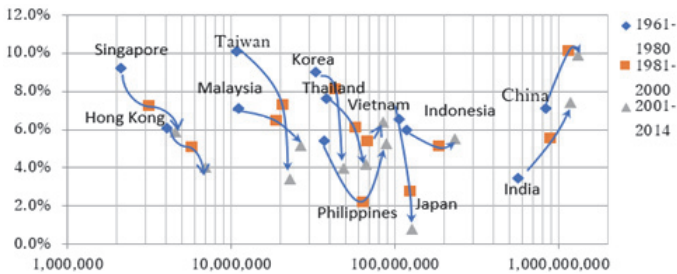
2. 아시아의 성장 메커니즘

확실히 일국적인 틀에서 아시아 국가의 발전을 판단한다면 각국의 산업화 정책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신흥국이 개발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래서는 동아시아 성장의 특징에서 놓쳐버리는 것이 있다. <그림4>는 동아시아 국가들마다 인도를 추가하여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과 인구 규모와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성장률을 1960~80년, 1981~2000년, 2001~14년 순으로 보면, 성장률은 일본을 예외로 하고, 신흥국은 인구가 적은 NIES, ASEAN에서는 고성장률에서 점차 저성장률로, 대조적으로 인구가 많은 중국, 인도는 저

1) 아카마츠는 1935년 후발국 일본의 면공업에서 시작하는 산업화 속에서 수입-생산-수출의 연속적 계기를 찾아내, 그 곡선의 형상에서 기러기의 비행을 떠올려 ‘안행 형태’라고 이름 지었다(平川均, 2013). 그는 안행 형태를 기본형으로 한 일본산업의 발전과 부차형으로서의 일본 산업구조고도화와 국제적인 단계적 산업 이진을 종합적으로 포착한 산업발전의 동태론을 전개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안행 형태형 발전을 주장하고 있다(赤松, 1935; 赤松, 1937; UNCTAD, 1996; 小島清, 2003). 그것이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재평가받기에 이르는 것이다.

성장률에서 점차 고성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골드만 삭스의 J. 오닐은 2001년에 세계 경제에서 G7을 대신하여 성장할 국가의 집합으로서 BRICs를 조어(造語)했다(O'Neill, J. 2001). BRICs의 중요한 공통항은 인구였다.²⁾ 그런데 BRICs나 인구 대국의 고성장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용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경제학으로는 해명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지적이 있다(末廣昭. 2014 ; Deaton, Angus. 2013, 일본어 역서, 254). 그러나 그러한 지적이 올바른 것일까?

<그림4> 동아시아와 인도 경제의 시기별 성장률과 인구 규모



출처: 필자 작성. World Bank. 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2012.

주: 인구(대수 눈금)는 각각 1971년, 1991년, 2007년 자료. 홍콩의 GDP는 1965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했고, 베트남의 GDP는 1984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했고, 대만의 자료는 1960~2011년 것을 사용했다.

FDI를 글로벌한 관점에서 파악해보면 위 변화의 구조가 분명해진다. <그림5>는 세로축을 시장공간, 가로축을 생산공간으로 삼고 각각을 선진 경제와 신흥경제로 나눠서 정리한 FDI 매트릭스다. 제1사분면은 선진경제에서 다른 선진 경제로 향하는 FDI이며 상호 투자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1960년대부터 21세기 초까지의 중요한 투자형태이다. 제2사분면은 선

2) 오닐의 논문에 사용된 2000년 전후의 BRICs 인구는 다음과 같다. 중국 12.67억, 인도 10.02억, 브라질 1.68억, 러시아 1.45억 (O'Neill, J. 2001, 4).

진경제로 제품을 역수출하는 선진경제에서 개발도상경제로의 투자형태이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특히 왕성했던 개발도상국 진출모형이며 NIES가 이 투자를 받아들였다. 투자목적은 저임금 활용이었다. 제3사분면은 진출국 현지 시장의 잠재력이 주목받아 일어나는 FDI이며, 이 모형은 21세기 들어 중국과 인도에 대한 투자에서 전형적으로 보인다. 신흥경제의 발전정책도 그것에 맞추어 바뀌게 된다. 제2사분면은 수출주도형 발전정책이 채택되고, 제3사분면에서는 국내시장 발전과 그에 적합한 외자정책이다.

<그림5> 투자목적별 FDI와 신흥경제 발전모델의 변천

시장 (입지·공간)	선진경제	수출지향형 FDI (NIES형 발전) (수출주도형 발전 모형)	선진경제지향형 FDI (선진경제상호투자형 발전 모형)
	신흥경제 (개발도상경제)	잠재시장·현지시장지향형 FDI (PoBMEs형 발전) (신흥시장주도형 발전모형)	
		신흥경제(발전도상경제)	선진경제

생산 (입지·공간)

출처: 필자 작성. 히라카와, 2016. Hirakawa et al. eds. 2017을 수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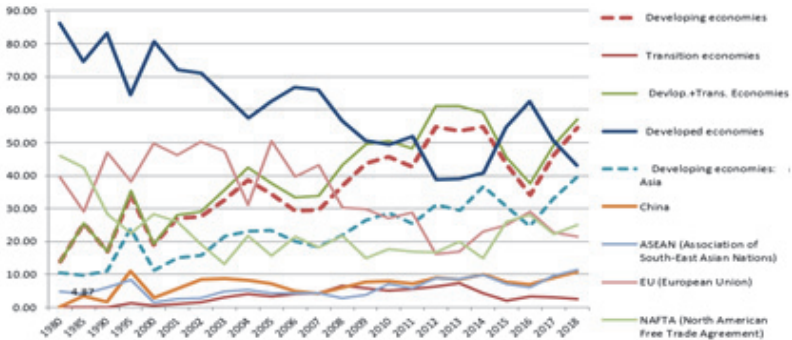
주: NIES: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PoBMEs: Potentially Bigger Market Economies

이 1사분면에서 3사분면으로의 투자 변화는 실제로 세계 FDI의 유입 구조에도 반영되어있다. <그림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1세기 초까지 FDI의 투자처는 압도적으로 선진경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1980년대부터 개발도상(신흥)경제가 유입처로 등장하게 되었고, 2010년 대가 되자 그 점유율이 오르락내리락하고는 있지만, 선진경제와 투자처를

■ —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메커니즘과 일대일로 구상 ■ 히라카와 히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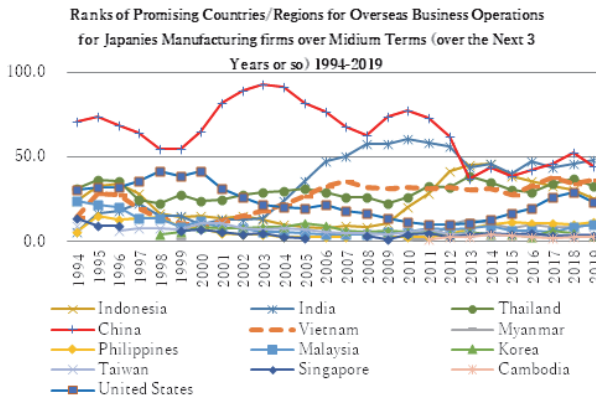
양분하기까지에 이르고 있다. FDI의 절반은 신흥 경제를 향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다.

<그림6> FDI의 유입 지역별 구성의 변화(1980~2019년)



출처: UNCTADstat를 근거로 필자 작성.

<그림7> 일본 제조업 기업의 중기적³⁾ 유망사업전개 대상국(1994~2019년)



출처: 국제협력은행(JBIC) 「我國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 각 년도에
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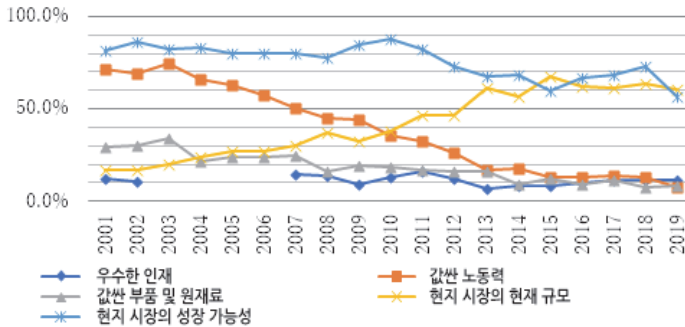
3) 향후 3년 정도의 시기.

여기서 신흥경제가 FDI를 끌어들이는 유인을 확인해두자. 필자는 이러한 투자처를 포브메스(PoBMEs)⁴⁾라고 부른다. 잠재적인 대시장경제를 보유한 인구대국이라는 뜻이다. 사실 낮은 소득수준은 부정적인 지표가 아니라 성장의 여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인구 규모의 크기는 큰 잠재력의 지표가 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자본을 불러들여 성장률을 밀어 올린다. BRICs가 그 전형이다. ASEAN은 회원국에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를 포함하며 동시에 지역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SEAN의 총인구는 6억 5천만 명(2018년)에 달한다. 2015년 12월 말에는 ASEAN 경제공동체(AEC)를 발족시켰다. 21세기 들어 중국에 진출한 외자 기업은 중국 한 나라에 대한 생산기지 집중이 가지는 여러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China + 1’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제도화의 기운이 ASEAN에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의 해외 진출 제조기업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림7>과 같이 일본기업의 중기적인 투자처로 중국, 인도와 함께 최근 ASEAN 국가가 선택되고 있다.

<그림8>은 투자처로써 유망한 이유를, 중국을 예로 들어 확인한 것이다. 21세기 초에는 유망한 이유가 ‘현지 시장의 향후 성장성’과 ‘값싼 노동력’이었다. 그러했던 것이 ‘값싼 노동력’은 일관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대신 ‘향후 성장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현지 시장의 현재 규모’가 늘고 있다. 값싼 노동력은 NIES로 가는 FDI의 주요 목적이었다. 그것이 시장 잠재력과 현재의 시장 규모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4) ‘포브메스’는 Potentially Bigger Market Economies (잠재적 대시장경제)의 약칭이다. 한편 아시아는 인구구성에서 ‘보너스’ 단계에서 ‘오너스(onus)’ 단계로의 이행, 또 ICT 발달에 따른 것이지만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심각한 실업 문제의 과제를 안고 있다. 향후의 큰 과제이다.

<그림8> 중국을 유망한 중기적 사업전개처로 삼은 이유



출처: <그림7>과 같음.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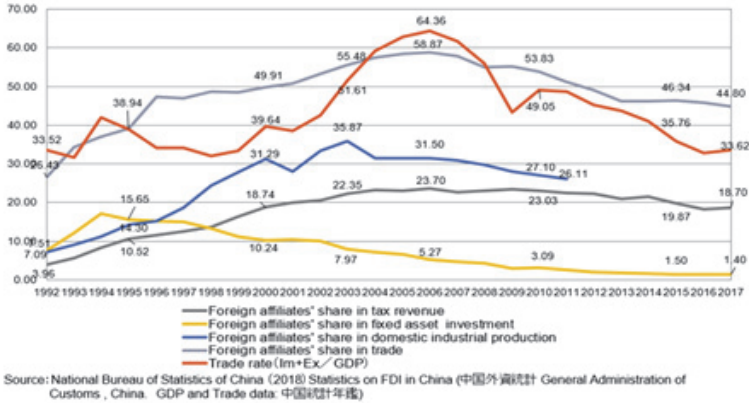
주: '우수한 인재'의 곡선이 2003~06년에 사라진 것은 이 동안 질문항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임.

중국은 NIES형 투자처에서 PoBMEs형 투자처로,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는 ASEAN에서도 인도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ASEAN은 1980년대에는 국내보호정책에서 외국기업의 유치와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전환했다. 인도는 ICT의 역외 거점으로서 1990년대 이후 특히 21세기에 들어 그 성장잠재력이 주목받고 있다.

3. 중국의 경제발전과 이중의 자유향

중국은 이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다. 중국은 1978년에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했고 80년대에는 국내개혁에 착수하여 90년대에는 개방정책에 나섰다.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한 남순강화가 대외개방의 기점이 되었다. 2001년에는 WTO 가맹도 달성했다. 장기간에 걸친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연해부 경제특구의 설치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연해부 생산기지를 통해 급격하게 수출을 증가시켰다. 중국은 '아시아의 중국'에서 '세계의 중국'으로 도약을 달성한 것이다.

<그림9> 중국의 무역의존도, 수출에서 차지하는 외자계 사회사의 점유율, 기타 추이(1992~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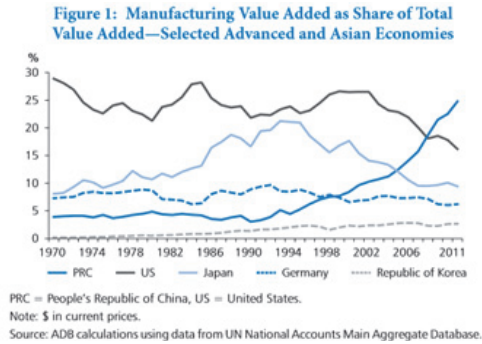
출처: 히라카와(2019, 19)

중국경제의 발전을 살펴보면, 그것은 동아시아의 수출주도형 발전의 경로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게다가 동시에 2000년대 첫 10년의 후반기에는 중국경제가 질적 전환을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중국의 무역의존도 외에 국내수익, 고정자산투자, 국내산출액, 무역에서 차지하는 외자계 사회사 점유율 추이 <그림9>를 보면, 먼저 무역의존도(무역/GDP)는 2006년의 최고점(64.4%)을 지나면서 감소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수치는 절반인 33.6%이다. 나머지 지표도 무역에서 차지하는 외자계 기업 점유율을 비롯하여 확실히 감소하고 있다. 무역에서 차지하는 외자 기업의 점유율은 2006년에 최고점(58.9%)이 되었고 지금은 10%포인트 저하되었다. 중국 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외자 점유율은 2003년 35.9%에서 2010년에는 26.1%로 줄었다. 고정자본투자는 1994년에 최고점(17.1%)에서 줄어들어 지금은 1.4%다. 중국은 대외의존도와 외자계 기업이라는 두 가지 지표에서 자율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 —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메커니즘과 일대일로 구상 ■ 히라카와 히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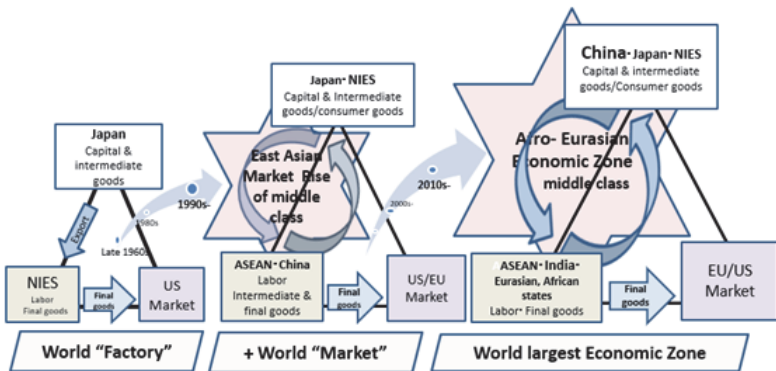
<그림10>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의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점유율은 21세기 들어 급상승했고 2010년에는 미국마저도 웃돌고 있다.

<그림10>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 차지하는 주요 경제의 점유율 추이(1970~2011년)



출처: Choi and Rhee(2014, 9)

<그림11> 아시아경제발전의 구도-성장 트라이앵글의 고도화와 장래상



출처: 필자 작성.

여기서 아시아의 미래상을 미리 알아보자면 <그림11>과 같이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PoBMEs의 발전은 중국 다음으로 인도, ASEAN 등이 이어간다. 이렇게 하여 이 아시아경제의 발전 조류는 중국이 내건 ‘일대일로’ 구상 때문에 가속될 것이다. 그 성패는 아프로-유라시아(Afro-Eurasia) 경제의 가능성, 또 그 질적 성격을 포함하며 미래상을 좌우할 것이다.

IV.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선(沿線) 국가

1. 시진핑 정권의 탄생과 일대일로 구상

일대일로 구상은 2013년에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꺼내든 경제외교정책으로, 인프라 투자 중심의 국제개발구상이다.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에서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이어 10월 인도네시아에서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제창이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승인되어 2014년 11월 APEC 베이징회의 석상에서 일대일로 구상으로서 국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2015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교부·상무부의 의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 및 추진 비전과 행동’(이하 ‘비전과 행동’)에서 그 내용이 발표되었다.

그러면 일대일로란 무엇인가? 그 구상의 탄생에는 중국의 다양한 요인이 배경에 있었다. 거기에는 대략 7가지 요인이 거론된다.⁵⁾ (a) 지도자의 야심, (b) 중국경제의 대국화, (c) 자원의 안전보장, (d) 중국 내 과잉생산과 신장타이 대책(新常態對策), (e) 미국 주도의 TPP12 대책, (f) 중국 내 소수 민족 대책, 신판 서부 대개발정책, (g) 위안화의 국제화이다.

5) 필자는 본고에서 (g) 요인을 덧붙였다. 지금까지 그것은 장래적 목표이기는 했어도 눈앞의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대립 격화가 이 과제까지 ‘일대일로’의 목적에 덧붙였다고 생각한다.

위 요인들을 순서대로 확인해보자. (a) 시진핑은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되자 모든 정치국 직원과 함께 국립박물관의 전시 ‘부흥으로 가는 길’을 견학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대한 꿈’으로 삼은 중요 담화를 발표했다. 2017년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의 아래에서 2035년까지 경제력, 과학기술에서 세계 일류국가가 되고, 21세기 중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국력과 영향력을 지닌 국가’가 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2018년 3월에는 국가주석의 임기 2기 10년의 제한을 철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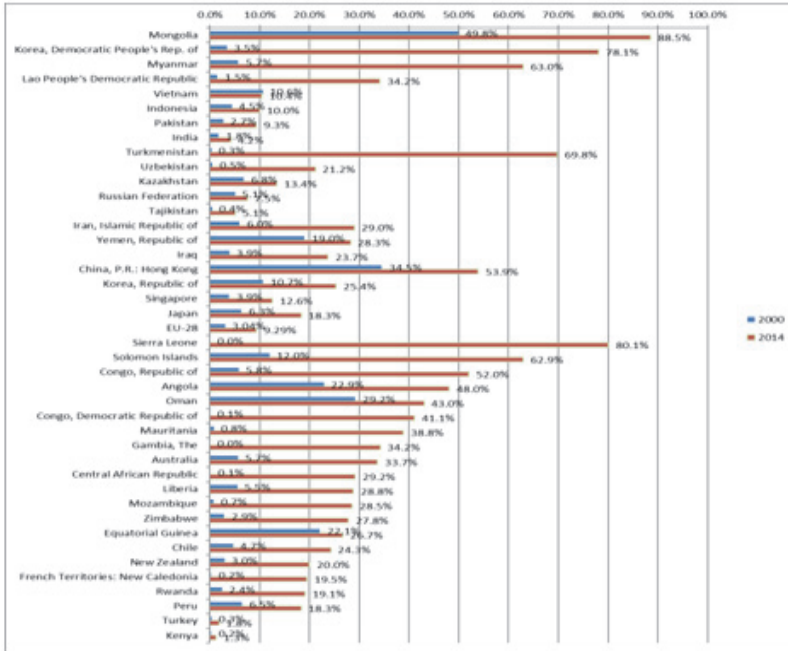
(b) 2010년 중국의 GDP는 일본을 넘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외환보유액은 2006년부터 일본을 넘어 세계 1위이고, 2014년에는 3조 8,590억 달러, 해외직접투자도 2006년부터 급증하여 2014년에는 1,230억 달러에 달했다.

(c) 중국은 경제발전에 따라 소재를 중심으로 하여 급격하게 소비를 늘렸다. 세계소비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점유율을 2000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철광석은 18.0%에서 57.4%, 석탄 29.5%에서 50.6%, 구리 12.8%에서 56.5%로 급증했다(内閣府. 2015, 11). 이 소비는 자원수입을 급증시켰다. <그림12>는 세계 각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를 2000년과 2014년으로 본 것이다. 중국 주변국, 아프리카, 유라시아의 개발도상국이 급격하게 대중 수출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원공급망의 확보는 중국에 있어 자원 안전보장 문제가 된다. 이러한 시각으로부터 남중국해와 인도양에 대한 중국의 해양 진출을 파악해 볼 수 있다.

(d) 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에 중국 GDP의 13%에 해당하는 4조 위안의 국내 부양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악화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 중심의 이 경기부양책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잉 생산·수출에 직면했다. 또한, 2010년대에 들어서자 지난 30년간에 걸친 연평균 10%의 고성장 시

대가 종식을 고하면서, 2014년에는 ‘신창타이(新常態)’라고 불리게 되었다. 고용대책은 정책의 중요한 과제였다.

<그림12> 각국의 대중국 수출 점유율 (2000, 2014년)



출처: 필자 작성. 자료는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UN Comtrade Database (EU-28 만)

(e) 시진핑 체제가 성립된 2012~2013년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캐나다와 멕시코, 마지막으로 일본이 추가되어 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진 시기이기도 했었다. 환태평양 무역은 중국발전의 생명선이기도 하다. 그 무역에서 중국을 제외하려는 의도가 들어간 새로운 규칙(rule)이 깔릴 가능성이 있다.

(f) 중국 국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국내 격차의 축소는 21세기에 큰 과제가 되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접경 지역에서 있는 소수 민족 문제와 격차 축소 등은 국내 정책일 뿐 아니라 외교상으로도 의의가 있다.

(g) 위안의 국제화는 당면한 정책 과제라기보다는 미래과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 대립이 깊어가는 가운데, 정책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대일로 구상에서 주목할 점은 국내적 과제와 대외적 목표가 일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를 ‘공공재’의 제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강국화(強國化)와 외교목표가 일체화되어 양면성을 가진다. 필자는 이것을 패권과 공공재 틈사이의 일대일로 구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러나 어떤 국가라도 국익을 무시하고 대외정책을 내세우는 일은 없다. 문제는 그 국익의 속 내용이다. 따라서 평가에서는 실태에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2. 일대일로 구상과 인프라 투자 국제협력

일대일로의 기본 문헌이라고 간주되는 ‘비전과 행동’은 그 이념에서 유엔 헌장의 평화 5원칙 ‘주권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 공존’의 준수가 구가되어 있으며, 실크로드 정신으로서 ‘평화와 협력, 개방성과 포괄성, 상호 학습, 상호 이익’이 거론되어 있다. 당면한 건설에서는 신 유라시아·랜드 브리지 등 5개 경제회랑의 공동건설이 중점 계획되어 있다. 중국과 유럽을 잇는 육상 수송 및 에너지 인프라 건설, 해상 노선 건설 등이다.

또한, 연선 국가와의 양국 간 협력, 다양한 지역 국제협력 기관과의 협력이 거론되어 있다. 덧붙여서 중국국가정보센터의 포털 사이트에 대한 최근의 접속으로 확인해보면 일대일로 건설협정 서명국 수가 143개국에

달하고 있다(國家信息中心. 검색일: 2020.5.2.).

무엇보다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2017년에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21세기의 실크로드’에 추가되었고 이듬해 2018년에는 북극해 루트가 ‘빙상의 실크로드’라고 불리며 구상에 추가되어 있다. 도대체 일대일로란 무엇인가? 구체성 없는 ‘별자리’ 같은 것, 연선 국가를 선택하는 일에도 ‘확실한 논거도 일관성도 없으며 정책도 불명확’하다는 등 중국 연구 전문가 사이에는 엄격한 견해가 있다(高原明生. 2018 ; 伊藤亜聖. 2018). 물론 일대일로는 변화무쌍하여 그 해석을 하는데 망설임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일대일로는 시진핑 체제의 대외 외교정책의 총칭 또는 이념으로서 관계국과의 관계도 감안하면서 객관적으로 그 실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일대일로 구상이 경제면에서는 어떻게 비추어졌는지를 확인하자. 당초에는 그것을 중국의 마셜플랜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었다(FT 2014. 11.12. 社説; 關. 2015). 중국 정부는 이 표현에 부정적이었지만(王毅. 新華網 2015.3.9), 구상의 규모가 1.4조 달러로 중국 GDP의 9%, 마셜플랜의 12배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South China Morning Post. Aug. 8, 2016). 맥킨지와 노무라홀딩스는 1년 투자액을 1,5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Guardian. May. 12, 2017 ; Nomura Asia Special Report. Apr. 16, 2018).

자금의 대부분은 말할 나위 없이 중국이 공급한다. 중국은 2014년에 독자적으로 실크로드 기금을 마련했다. 국제금융기관으로서는 신개발은행, 통칭 BRICS 은행을 설립했고 이듬해 2015년 말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발족시켰다. 설립 시 AIIB에는 57개국이 가맹했고 지금은 G7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20년 현재 회원은 102개국에 달한다.

그러면 일대일로란 어떠한 건설 구상인가? 고속도로, 철도, 에너지 파이

프라인 건설, 공항과 항만 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공업 단지의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필자에게는 이 구상이, 중국의 발전 경험은 물론 아시아의 20세기 전후 부흥의 교훈이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스에히로 아키라(末廣昭)는 이를 “무역, 투자, 원조의 ‘삼위일체’적 전개, 또는 무역, 투자, 원조, 대외 경제가 합작한 ‘사위일체’적 전개가 지적되어 왔다.”고 한다(末廣昭. 2018, 107). 삼위일체는 상업주의적이라고 일컬어졌던 일본의 개발원조를 총괄할 때 지적되던 특징이다. 또한, 경제산업당국은 아시아 NIES가 산업화 초기에 설치했었고 그 뒤 중국이 연해부의 개방정책으로서 채택했던 개발정책이다. 일대일로는 연결성을 중시하면서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와 산업화를 촉진하여 무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발 패키지이다. 그것이 마셜플랜으로 비유되었다시피 중국 정부의 주도권과 자금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구상이 된다(平川均. 2019).

3. 연선국가와 일대일로 구상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포털 사이트에는 국제협력관계를 맺은 143개 국가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AIIB 회원국 100개국보다 많은 것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 중국에 대한 강한 기대를 드러낸다. 실제로 아시아개발은행이 두 차례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ADB Institute. 2009 ; ADB. 2017), 인프라 수요는 방대하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기존의 국제금융기관 대출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차입국은 용자조건에도 불만이 있었다.

주된 연선 지역에서의 일대일로에 대한 기대를 확인해보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2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독립한 나라들이다. 러시아는 독립 이후 혼란이 이어져서 국력도 약해졌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당연히도 기대가 높아지게 된다. 중국에게도 석유를 비롯

한 자원의 수입 대상으로서 중앙아시아는 전략적 중요 지역이었다. 2015년 7월에는 러시아 우파시에서 제7회 BRICs 정상회담, 제15회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이 합동 회의로 열렸는데, 이때 중국·몽골·러시아 정상회담도 개최되어 3개국의 기합 프로젝트로써 경제회랑 건설이 합의되었다. 성장 중인 ASEAN 국가에서는 인프라 정비가 큰 과제였다. 정권을 잡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에서 육지와 바다의 실크로드 구상을 발표한 것은 당연하다. 남아시아에서는 인도가 팽창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고 있지만, 인도는 BRICS 정상 회의에 참여했고 신개발은행, AIIB에는 참여하고 있다. 인도는 경계하고 있지만,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경제회랑(CPEC)을 주력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다.

중·동유럽 국가 16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2012년부터 정상 회의(CEE16+1 Summit)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중 11개국이 EU 회원국이었다. 프랑스, 독일 등 EU 주요 국가의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본체만체하면서 CEE 16개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발족하고 있다. 서쪽에 치우쳐 있는 EU에 비해 중·동유럽 국가들은 동쪽에 위치하면서 성장하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서 장래성을 보고 있었다. EU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이탈리아가 2019년 3월에 중국과 일대일로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며 참여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위의 <그림12>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아프리카 국가는 21세기 들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급속히 키워왔다. 2000년부터 3년마다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이 개최되면서 2006년, 2015년, 2018년에는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15년 정상회담에는 아프리카 50개국 정상이 참석하여 요하네스버그 선언을 발표했다. 2018년에는 53개국의 아프리카 정상들이 참여하여 베이징 선언과 2021년까지의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일대일로가 지지를 받았으며 8대 이니셔티브가 합의되었다. 산업진흥, 인프라 연결, 무역 원활화, 녹색 개발,

인적 교류 등의 협력 강화가 구가되고 있다(Ministry of Commerce PRC, 2018).

중국은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2017년부터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2017년 5월 포럼에는 29개국 정상과 100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2019년 4월에 열린 제2차 포럼에는 37개국 정상과 100여 개국의 대표들이 모였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비판이 많아지면서 과제 또한 분명해졌다.

4. 일대일로 구상의 비판과 과제

일대일로 구상이 발표되고 5년 가까이 지나자 중국이 성과를 발표하는 다른 편에서 많은 비판이 생겨났다. 2016년에는 그리스 피레우스 항구의 주식 51%를 중국 국유기업 코스코가 취득하여 관리권을 장악했고, 파키스탄 그와다르(Gwadar) 항구도 53년간의 조차권을 중국이 얻었다. 2017년에는 지부티에 중국 해군기지가 개설되었으며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도 99년간의 관리 권한을 중국 기업이 취득했다. 이러한 사실 이외에도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과제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7년 말에는 총 200억 달러나 되는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이 국익 우선, 법령 무시, 환경 악화, 주민의 반대 등을 배경으로 하여 취소가 잇따랐다(VOE. Nov. 5, 2017).

2018년 3월에는 미국의 싱크탱크 세계개발센터(CGD)가 일대일로 연선에 위치한 빈곤국에 대한 막대한 용자가 상환 불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CGD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68개국의 부채 평가를 시행하여 파키스탄, 지부티, 몰디브, 라오스, 몽골, 몬테네그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8개국이 변제가 불가능한 중(重)채무국이라 지적했다(Hurley, Morris, and Portelance. 2018). 닷케이 아시아 리뷰와

뱅크(Banker)도 공동으로 일대일로 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달에 결과를 공표했다.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는 일대일로 관련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파키스탄, 스리랑카, 몰디브, 라오스에서는 채무 불이행의 높은 위험성을 지적했다(Nikkei Asian Review. March. 28, 2018).

예전부터 대중 경제론은 있었다(Schneider, H. 2017). 하지만 ‘채무 함정’론에 의해서 비판과 경계심이 단번에 고조되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채무 함정’과 동시에 개발이 지닌 사회적, 환경적 영향 등으로부터 신(新)식민주주의의 여부도 논의하게 되었다(Guardian, Jul. 31, 2018 등). 로이터는 2018년 4월에 개최된 보아오(博鰲)·아시아포럼 연설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대일로로 ‘음모(Chinese plot)’가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전하고 있다(Reuters, April. 11, 2018).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는 2018년 5월 하원 총선에서 부정부패와 족벌주의를 비판한 야당의 마하티르 전 총리가 예상을 깨고 현직 총리에게 승리했다. 마하티르는 정권에 취임하면서 전 총리가 추진해왔던 중국 의존 고속철도 계획을 중단하기 위해 활동했다. 2018년 9월에는 남아시아 몰디브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에 대한 채무가 쟁점이 되어 현직 대통령이 야당에 패배했다.

이러한 비판과 경계심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채무 함정’은 중국의 의도적인 정책이었던 것인가? 패권을 잡고자 하는 시도가 일대일로 구상인 것인가? 이미 서술했다시피 중국의 국익에 관한 구상인 것은 틀림없다. 다만 그것이 패권 혹은 군사적·정치적 지배와 직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래 중국혁명 후에도 오랫동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적 과제에 쫓기면서 세계화의 경험은 지극히 제한받아 왔었다.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중국의 극적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일대일로의 슬로건을 내걸고 국유기업, 지방정부 등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즉흥적인 세계화였다. 해외 프로젝트의 실시에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배려를 게을리했던 많은 원인

의 상당 부분은 국제경험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21세기에 들어서 이뤄낸 해외 진출에서 많은 실패 사례를 낳고 있다.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2006~2011년)의 해외자원 개발투자는 95% 이상이 실패했다고 여겨진다(中國央廣網. 2014.6.3.; 三浦有史. 2017). 회상해보자면 1970년대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에서도 많은 실패 사례가 있었다.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로부터 강한 비판이 있었다. 영국 왕립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중국 기업의 해외 활동 경험부족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Cainey, A. 2018; 平川均. 2019).

중국도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 2018년 3월에 왕이(王毅) 외무장관은 발리의 강연에서 일대일로는 “국제규칙을 존중하고 시장의 규칙(rule)에 따라 운용할 것이다”라고 했으며, 2019년 4월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는 시진핑 본인이 인프라 건설에서 ‘국제규칙의 준수’, 채무의 연속성, 투명성 등을 표명하고 있다. 환경문제에도 긍정적인 공헌을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해외 투자국가 위험평가보고서』를 2014년부터 발간하고 있는데, 2019년의 보고서는 2017년의 해외 투자액의 86%, 57개국을 망라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해외자산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진출에서는 투자설명서의 작성, 투자처의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 기관과의 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에는 선진국의 다수가 국가안전보장의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은 해외 진출 시 투자의 급격한 성장, 선진국의 전략적 부문·자산에 대한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였다(中國社會科學院. 2019).

IV.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 위기

1. 미중 무역전쟁과 ‘1단계 합의’

2018년 3월, 그 1년 전에 ‘미국제일’을 슬로건으로 탄생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대중 무역적자 감축에 나섰다. 이렇게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은 ‘1단계 합의’가 2020년 1월에 서명되고 2월에 발동되기는 했지만, 무역전쟁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갈등의 첨예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2018년 7월, 8월, 9월에 3차례에 걸쳐서 대중 수입 2,500억 달러에 추가 관세를 발동했다. 2019년 9월에 발동된 제4탄에서는 나머지 수입액 2,800억 달러 중 1,200억 달러(LIST 4A)에 추가 관세 15%가 부과되었다. ‘1단계 합의’는 결국 제4탄 LIST 4A의 추가 관세만이 7.5%로 인하되었고 그밖에는 철폐도 인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중국은 재화와 서비스 수입을 2년 동안 2,000억 달러 증가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 쪽이 1년 전부터 요구해온, 양국이 대등하게 추가 관세를 철폐하자는 등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 대폭적인 양보이다. 이 타협은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공세로 중국경제가 받는 악영향이 이미 심각해져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 대책으로서 이 이상의 대중 관세인상이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무역전쟁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무역전쟁이 당초의 무역적자 감소문제에서 안보문제, 정보통신기술의 패권 문제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의 무역협상 단계에서부터 중국의 강제적 기술이전, 사이버 공격,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정책 등이 협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을 재인식시킨 것이 같은 해 10월에 열렸던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에서의 중국에 대한 전면적 비판 강연이었다. 미국이

WTO 가입 시 기대하고 있었던 중국 정치체도의 민주화라는 움직임도 역류하고 있다. 중국이 2015년에 시작한 산업정책 ‘중국제조 2025’의 포기가 미국의 중요한 요구 사항이 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일당 지배체제를 협상의 핵심으로 삼은 것이다.

2018년 1월에는 이미 미국의 국가방어전략(NDS)이 중국을 남중국해에서 군사화하고 있는 ‘전략적 경쟁국’이라고 명기하고 있었지만, 이 해가 가기 전에 중국 기업을 암묵적인 표적으로 삼은 다양한 규제법이 제정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화웨이의 부사장 명완저우(孟晚舟)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캐나다 정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듬해 2019년 5월에는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거래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미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하여, 상무부는 화웨이와 그 자회사 68개사를 ‘수출제한목록(Entity List)’에 추가했다(Squire Patton Boggs. 2019).

이 조치의 영향은 미국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은 전 세계의 기업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생산 네트워크에서 중국 하이테크 기업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5세대(5G)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의 배제가 미·중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할 것이다. AI와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이 향후 미국의 패권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될 텐데 이와 관련된 위협을 없앤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첨단기술 수출규제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DOC, U.S. 2020).

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에는 Google, Facebook 등이 건설하고 있던 미국-중국-홍콩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부설계획이 사법부의 반대로 변경되었다. 케이블의 통신 장치와 배전장치의 양륙지를 홍콩으로 정하면 통신 데이터가 중국에게 수집되는 보안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해저 케이블의 양륙지는 홍콩에서 대만과 필리핀으로 변경되었다(日經新聞. 2020.6.19; 日經 Xtech. 2020.6.23). 미국이 안보

위험으로 간주하는 모든 영역에서 중국 정부,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탈동조화’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제1단계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4단계의 추가 관세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까지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외교상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타산의 산물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정권과 미국 의회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딜’을 넘어 미국의 안보 위협, 중국의 체제문제, 이데올로기가 관련된 패권문제로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2. 코로나19 위기와 미·중 대립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폭발적 발병(팬데믹)이 무역전쟁으로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COVID-19)의 중심은 2020년 6월 현재 미국과 신흥국으로 옮겨져 있다. 돌아보면 2020년 1월 23일, 우한(인구 1100만)의 도시 봉쇄(lockdown)가 보도되면서 그 강권적인 조치에 놀라움이 일었다. 하지만 3월에는 미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자 미국은 EU로부터의 도항을 금지했고, EU도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이 차례로 외출 금지, 도시 봉쇄, 국경 봉쇄를 단행했다. 사람들의 이동이 단번에 제한되자 경제활동이 급정지했다.

2020년 5월 이후, 주요국에서 전자기기, 자동차에서부터 의료품, 섬유, 잡화 등의 제조업이 생산을 재개하기 시작했지만 중국 의존이 조업 제약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의 초동대응에서 뒤진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4일 세계보건기구에 기부금 정지 보복에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이 3월에 이뤄진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의 눈치를 본 것 때문이며, 그것이 감염을 확대시켰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3월 말에는 중국에 대한 보복 방안으로서 불과 3개월 전의 ‘제1단계 (무역 협

상) 합의' 파기, 덧붙여 중국에 코로나 감염증의 손해 배상 청구(1600억 달러)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제재안은 중국이 소유한 (미국) 국채 상환의 거부마저도 포함되어 있다(U.S. Sun. April. 28, 2020; Washington Post. May. 1, 2020; 日經新聞. 2020.5.2).

같은 해 5월 트럼프 정권은 미국연방직원을 위한 연금기금에 이 기금이 예정하고 있던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중지시켰다(日經新聞. 2020.5.15). 그 목적은 중국에 대한 자본공급의 차단이다. 미국 상원도 '중국 기업을 염두에 두고 회계 감사를 거부한 외국기업을 상장폐지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日經新聞. 2020.5.24.). 미국 기업의 중국투자,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속 꺼내고 있는 대중 강경책은 차기 대선 대책으로서 그가 코로나19 대응 실패, 기타 국내 문제의 부적절한 대응을 내셔널리즘에 호소하여 비껴가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물론 중국 정부의 대응조치도 거론된다(日經新聞. 2020.5.24). 미국은 물론 세계의 미국 주재 기업, 대중 투자기업이 미·중 대립에 농락당하고 있다.

3. 코로나19 위기와 일대일로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수출은 일대일로에 힘입어 다른 나라를 크게 앞지르며 증가해왔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세계 건설수출액의 증가율은 선진경제의 2배에 비해 중국은 12배였다(WTO. 2019, 28). 그것이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해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정지되어 중국 건설수출에 일제히 중단,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이후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은 중지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속철도공사, 캄보디아에서는 시아누크빌의 경제특구 건설이 멈춰있다. 방글라데시, 케냐,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등에서도 프로젝트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Shepard, W. 2020; Wheeler, A. 2020).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과 중국을 잇는 철도건설 일부가 올해 3월 하순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중국 기업이 갑자기 귀국하여 라오스인 노동자, 트럭 운전자 등에게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있다(大塚智彦, 2020.4.24). 5월에는 중국 일대일로 기함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의 채무가 관련되어 파키스탄 정부가 중국에게 연기를 요청했다고 보도되었다(日經新聞, 2020.5.20.).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로 공사가 중단된 자카르타~반둥 간 고속철도 건설계획의 재검토를 시작하여 일본에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 2019년 9월 일본-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자카르타~수라바야 사이의 새로운 철도 계획에서 정부 간 문서에 서명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팽창하는 비용 절감을 위해 위의 두 계획을 자카르타~반둥~수라바야 간 고속철도 건설로 변경하여 일본의 협력을 얻고자 한 것이다(日經新聞, 2020.6.8). 중국의 ‘채무 함정’에서 자주 거론되는 스리랑카의 대중 채무를 다룬 영국 왕립연구소의 한 연구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과 ‘채무 함정’론을 부정하고 스리랑카의 부채 관리 능력, 기타 개발문제를 제기하고 있다(Wignaraja, G., et al. 2020).

코로나19 위기로 축소된 세계 경제의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영향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는 선진국 이상으로 신흥국에서 심각하다. 일대일로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은 물론 실시하고 있는 국가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질이 새삼 추궁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 위기를 재빨리 억누른 중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가에 ‘건강 실크로드’라는 호칭을 붙인 의료지원에 나서고 있다. A. Brînză에 따르면 건강 실크로드는 일대일로 건강교류협력실행 3개년계획(2015-2017년)으로서 2015년에는 일대일로 구상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이

상에 불과했고, 협력형태도 양국 간 관계가 기반이지 국가 간의 네트워크가 아니었다(Brînză, A. 2020).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건강 실크로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이탈리아에 EU 국가는 지원의 손을 내밀 수 없었다. 대신 중국이 마스크, 인공호흡기, 그리고 300명의 의료진을 보냈다. 3월에는 감염 방호복, 마스크, 감염 테스트 키트가 이탈리아, 스페인, 아프리카 등 54개국에 배포되었다(Babones, S. 2020 April. 6; Wheeler, A. 2020). 중국은 코로나19 대책으로 다양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의료기구와 의료진을 보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마윈과 알리바바 재단은 우간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에까지 구제 패키지를 보냈다(Lancaster, K., et al. 2020). 이 또한 중국 정부의 뜻을 따른 의료외교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린 우한(武漢)의 의사를 ‘치안관리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실수를 범했다. 그러한 중국이 이후의 감염 억제에 성공한 것을 가지고 체제의 우월성을 호소하며, 마스크 외교라고도 불리는 건강 실크로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위화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로 선진경제가 일제히 경제를 급정지시키고 국내 대책에 쫓기는 가운데, 중국이 재빨리 위기에 빠진 나라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은 제3자에 의한 그 평가가 어떠한 부정할 수 없다.

VI.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일대일로와 세계 경제 전망

1. 위기 이후의 일대일로 구상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실패로 끝날 것인가? 재확인하고 싶은 것은 일대일로 구상이 그 탄생 배경 중 하나인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TPP) 12에 대한 대항책이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본고 IV장 1절에서 그것을 확인했다. 트럼프 정권의 대중 정책은 중국에 외교정책으로써의 일대일로 의의와 중요성을 더욱 제고하도록 작용한다(平川均, 2017.2.27).

워싱턴 소재의 국제전략연구센터(CSIS)의 두 연구원은 코로나 위기를 억누른 시진핑이 4월 초 저장성을 시찰하고 위기 이후의 정책을 신속하게 제시한 일에 주목했다. 코로나19를 누른 시 주석은 위기를 산업 디지털화의 기회로 포착하고, 5G 네트워크 등 새로운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면서 생명과 건강, 신소재 등 전략적 미래산업을 일으킬 것을 강조했다(Blanchette and Hillman. 2020; 人民網日本語版. 2020.4.3).

코로나19로 5월에 개최하게 된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진행한 ‘정부활동보고’는 다음과 같이 일대일로를 언급하고 있다. “질 좋은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한다. 함께 협의하고 함께 누릴 것을 견지하고 시장규칙과 국제적인 일반규칙을 따르며 기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발휘시키고 윈-윈 협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시진핑 정권의 고위 관계자도 일대일로를 중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으로서 견지하고 건강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의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ETRO ビジネス短信. 2020.6.15). 마·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중국의 외교정책에 흔들림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디지털 실크로드는 성공할 것인가? 5G가 미국의 안보에 관계되며 다가올 디지털 경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기술에서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이 화웨이이다. 5G에 관련된 필수특허 신고수에서 화웨이는 세계의 1/3 이상, 세계 기업 점유율에서는 15%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日經新聞. 2020.1.5.). 화웨이는 중국 국내시장의 지원도 있고 해서 경영을 지탱하고 있다. 기술과 생산의 자립화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추진하는 5G의 네트워크화에서 화웨이 제품 배제의 요청에 올해 2월 시점에서 동조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와 일본뿐이다. 한국과 필리핀은 이미 화웨이 제품의 도입이 끝났고 영국, 러시아, 인도, 태국, 바레인, 말레이시아는 받아들이기를 결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브라질은 채용이 거의 결정되어 있고 캐나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도 검토 중이다(Zhou. 2020, 11).

실제로 화웨이 제(製) 통신 네트워크의 정비는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지금까지의 거대 인프라 건설에 비해 비용이 현격히 떨어진다. 화웨이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에서 지난 2년 동안 820km의 광섬유 회선을 부설했지만, 그 비용은 4,400만 달러로 철도 부설 비용 4km분에 불과했다(Blanchette and Hillman. 2020).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미국이 포기를 강요하는 산업정책 ‘중국제조 2025’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전략적 산업 육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국내 산업 디지털화와 5G 네트워크·인프라 건설, 생명과 건강, 신소재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하면서 그것을 일대일로 연선 국가로 확대할 것이다. 중국은 건강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를 일대일로 외교의 핵심에 놓고 그것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2. 중국과 세계 경제의 전망

경제의 세계화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발전을 낳았고 21세기에 들어서자 미·중 사이의 패권 다툼이 그 전면에 나타나기까지 하였다. 패권의 전환기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과 긴장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와 그의 정권의 대중 무역전쟁, 그것에 뒤이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지금까지의 동아시아의 발전을 지탱해 온 메커니즘의 취약점, 과제가 분명해졌다. 중국 일극 집종의 생산 네트워크 또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편

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중국 기업의 대미국 FDI(추정치)는 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0% 감소했다(日經新聞, 2020.5.12). 한편 2020년 1월~4월 중국 기업의 FDI(금융 제외)는 전체로는 전년 대비 3.1% 감소한 335.7억 달러이지만,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FDI는 13.4% 증가한 52.3억 달러로 주요 투자처는 ASEAN 국가이다(JETRO 비즈니스短信, 2020.6.15).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기업에 새로운 기업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기업의 중국이탈은 아니다. 중국 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우회 수출을 목표로 삼는 ‘China+1’이라는 기업 행동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에 건 미·중 무역전쟁, 그것에 뒤이은 코로나19 위기는 VI장 1절에서 확인했다시피 일대일로 외교의 중요성을 제고할 것이다. 일대일로는 본고 IV장 2절에서 지적했다시피 대체로 NIES, 중국의 동아시아 발전의 성공 경험, 원조, FDI, 수출의 ‘삼위일체’형 발전의 개념에 따른 것이었다. 인프라 투자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였다. 일찍 코로나19 위기를 진압했던 중국은 체제 우위를 앞세워 코로나19 위기 소용돌이 속의 여러 나라에 건강 실크로드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5G를 필두로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디지털 실크로드로써 전략적 발전을 도모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 다음의 GDP 대국이다. 5G에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력에서도 세계에서 손꼽는 나라로 성장했다. 올해 4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2019년 특허 국제출원 건수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日經新聞, 2020.4.8.). 미국국가과학위원회(NSB)의 과학엔지니어링보고서는 2017년 R&D 국내지출규모(PPP기준)에서 중국이 미국의 5,490억 달러의 90% 수준인 4,96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덧붙여 말하면, EU 4,300억 달러, 일본

1,709억 달러, 독일 1,320억 달러이다. 2000년~2017년 R&D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미국 4.3%, 중국 17.3%이다. 한국이 9.8%, 인도가 8.0%로 뒤따르고 있다(National Science Board. 2020).

IMF의 최근 6월 경제성장 예측으로는 2020년의 경제성장률에서 플러스 성장을 예측한 국가는 중국(1.0%)을 제외하고 달리 없다. 세계 전체 -4.9%, 미국 -8.0%, 유로존 -10.2%, 일본 -5.8%로 역사적인 경제 축소를 경험할 것이다(IMF, 2020).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세계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증가시킬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큰 경제적 손실로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많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틀림없이 재조정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러나 일대일로 그 자체가 주요 선진국의 정치적 관심을 끌고 중국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으로부터 연선 국가에 대한 다양한 공적·민간 지원, 공여를 촉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6년 8월, 제6회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VI)에 참석하여 아프리카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2016년~2018년 민관 합계 300억 달러의 ‘양질의 인프라 투자’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FOIP)’ 구상을 밝혔다. 지금은 일본 ODA의 70% 이상이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공여되고 있다. 2019년 8월 TICAD VII에서도 연결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인프라 투자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外務省. 2020, 4).

그것이 또 중국의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무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환경의식도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세계의 주변 부로서 대부분 소홀히 여겨져 왔던 지역에 햇빛이 비취고 양질이 동반되는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트럼프의 대중 정책이 벼랑 끝 정책적인 색채를 띠는 가운데, 정치적·경제적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중국과 미국을 잇는 생산 네트워크는 구조 조정을 강요당하고 탈동조화가 진행될 것이다. 중국 일극 집중 네트

워크의 분산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강력한 우선순위를 매겨 일대일로 외교를 수행할 것이 틀림없다. 일대일로 국제협력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경쟁 관계 속에서 그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식 기반경제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의 정비기능을 하면서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새로운 경제의 국경을 탄생시킬 것이다(平川均, 2019). 장래를 내다보자면 아프로-유라시아 경제권의 기초 만들기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그대로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경제권의 형성으로 마무리될 리는 없다는 점이다(P. Khanna, 2019). 글로벌한 사회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이념적 위화감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분단, 정치적 대립은 강한 긴장 관계 속에서 추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은 높아지고 새로운 경제 국경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여겨지는 바이다.

참고문헌

〈중국어〉

- 中國央広網. 2014, ““十一五”期间中國企业海外矿业收购失败率超95%”
http://finance.cnr.cn/txcj/201406/t20140603_515611591.shtml
- 中國社會科學院. 2019, “《中國海外投資國家風險評級報告》主要觀點”
http://iiewp.cssn.cn/xscg/xscg_sp/201901/t20190116_4811983.shtml

〈일본어〉

- 伊藤亜聖. 2018, “中國・新興國ネクサスと『一帯一路』構想」末廣昭・田島俊雄・丸川知雄編” 中國・新興國ネクサス—新たな世界經濟循環—, 東京大學出版會.
- 大塚智彦. 2020년 4월 24일, “中國国ラオスで鐵道建設放棄” Japan In-depth, (<https://japan-indepth.jp/?p=51493>)
- 外務省. 2020, 2019年版開發協力白書 日本の國際協力, 外務省.
- 金泳鎬. 1988, 東アジア工業化と世界資本主義—第4世代工業化論, 東洋經濟新報社.
- 經濟企劃廳. 1994, 經濟白書 (平成6年版), 大藏省印刷局.
- 関志雄. 2015, “動き出した『一帯一路』構想—中國版マーシャル・プランの実現に向けて—” RIETIコラム <https://www.rieti.go.jp/users/china-tr/jp/150408world.html>
- カンナ、P. 2019, アジアの世紀—持續性の未来 (上), 原書房.
- 小島清. 2003, 雁行型經濟發展論 (第1巻), 文眞堂.
- 末廣昭. 2000, キャッチアップ型工業化論—アジア經濟の奇跡と展望—, 名古屋大學出版會.
- 末廣昭. 2014, 新興アジア經濟論, 岩波書店.

- 末廣昭. 2018, “東南アジアに南進する中國” 末廣昭・田島俊雄・丸川知雄編. *中國・新興國ネクサス—新たな世界經濟循環*, 東京大學出版會.
- 高原明生. 2018, “一帶一路構想は“星座”過度な期待は禁物”, *週刊東洋經濟*, 1月27日号.
- 内閣府. 2015, *世界經濟の潮流II*, 内閣府.
- 平川均. 1997, “東アジア工業化のダイナミズムの論理”, 粕谷信次編. *東アジア工業化ダイナミズム*, 法政大學出版局.
- 平川均. 2013, “赤松要と名古屋高等商業學校—雁行形態論の誕生とその展開に関する一試論—”, *經濟科學* 第60卷 第4号.
- 平川均. 2017, “トランプ大統領の『アメリカ第1』はアジア新興經濟をどこに向かわせるか” *世界經濟評論 IMPACT* No. 804, 2月27日
- 平川均. 2019, “『一帶一路』構想とアジア經濟—新たなフロンティとその課題—”, 平川均・町田一兵・真家陽一・石川幸一編. *一帶一路の政治經濟學*, 文眞堂.
- 平川均. 2020, “『コロナ危機』で世界經濟はどうなるか” *世界經濟評論 IMPACT* No.1681, 4月6日.
- 三浦有史. 2017, “理想と現實のギャップが鮮明となる中國の一帶一路”, *環太平洋ビジネス情報RIM*, 第17卷 第66号.
- 渡辺利夫. 1991, “アジアのダイナミズムをどうとらえるか”, 渡辺利夫・梶原弘和・高中公男 *アジア相互依存の時代*, 有斐閣.

〈영어〉

- Asian Development Bank : ADB. 1992, *Asian Development Outlook 1992*, Manila: ADB.
- ADB Institute. 2009, *Infrastructure for a Seamless Asia*, Manila: ADB.

- ADB. 2014, *Future of Factory Asia*, Manila: ADB.
- ADB. 2017, *Meeting Asia's Infrastructure Needs*, Manila: ADB.
- Babones, S. 2020, *The 'Chinese Virus' Spread Along the New Silk Road*, Foreign Policy, April 6. (<https://foreignpolicy.com/2020/04/06/chinese-coronavirus-spread-worldwide-on-new-silk-road/>)
- Blanchette, J. and Jonathan Hillman. 2020, *China's Digital Silk Road after the Coronaviru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 April 13.
- Bradford, Jr., Colin I. and William H. Branson. 1987, "Patterns of Trade and Structural Change", in Bradford and Branson eds., *Trade and Structural Change in Pacific Asia*,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înză, A. 2020, "Some Say China's Belt and Road Helped Create This Pandemic. Can IT Prevent the Next One?", *The Diplomat*, April 12. (<https://thediplomat.com/2020/04/some-say-chinas-belt-and-road-helped-create-this-pandemic-can-it-prevent-the-next-one/>)
- Cainey, A. 2018, *Belt and Road is not a (Completely) closed Shop*, Chatham House.
- Choi, B. and C. Rhee. 2014, *Future of Factory Asia*, ADB and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ERI).
- Department of Commerce, U.S. 2020, "Press Release: Commerce Tightens Restrictions on Technology Experts to Combat Chinese, Russian and Venezuelan Military Circumvention

- Efforts”, April.
- Hurley J., S. Morris, and G. Portelance. 2018, “Examining the Debt Implication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Policy Paper 121*, March.
- Deaton, Angus. 2013,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일본어 번역서 데이턴 A. 2014, 大脱出, みすず書房)
- Drucker, Peter F. 1997, *The Global Economy and the Nation-State*, Foreign Affairs, Vol.76, No.5, Sep./Oct.
- Hirakawa, H., N. Takahashi, F.C. Maquito, and N. Tokumaru eds. 2017, *Innovative ICT Industrial Architecture in East Asia*, Tokyo: Springer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0 June,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Lancaster, K., M. Rubin, and M. Rapp-Hooper. 2020, “Mapping China’s Health Silk Road”,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blog/mapping-chinas-health-silk-road>)
- Ministry of Commerce PRC. 2018, “Elaboration on the Eight Major Initiatives of the FOCAC Beijing Summit” (<http://english.mofcom.gov.cn/article/policyrelease/Cocoon/201809/20180902788698.shtml>)
- National Science Board. 2020,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20*.
- OECD. 1979, *The Impact of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on Production and Trade in Manufactures*, Paris: OECD.
- OECD. 2017, “The Future of Global Value Chains: Business as

- usual or “A New Normal?”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Papers*, No.41, July
- Okita, S. 1985, *Special Presentation: Prospect of the Pacific Economies,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ssues and Opportunitie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pril 29, Seoul, Korea.
- O'Neill, J. 2001, “Building Better Global Economic BRICs”,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Paper* No.66
- Schneider, H. 2017, “Opinion: The BRI – China’s road to hegemony, Geopolitical Intelligence Services” (<https://www.gisreportonline.com/opinion-the-bri-chinas-road-to-hegemony,economy,2318.html>)
- Shepard, W. 2020, “China’s ‘Health Silk Road’ gets a Boost From COVID-19”, May 27.
- Squire Patton Boggs. 2019, US adds Huawei and Affiliates to the Department of Commerce Entity List- What to Expect from the Final Rule, Lexology, May 21.
- UNCTAD. 1996,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1996.
- Wheeler, A. 2020, “Can the Health Silk Road Intervention Save China’s Belt Road Initiative from COVID-19 Geopolitical Fallout? Silk Road Briefing” (<https://www.silkroadbriefing.com>)
- Wignaraja, G., D. Panditaratne, P. Kannangara and D. Hundlani. 2020 March, “Chinese Investment and the BRI in Sri Lanka”, *Chatham House Research Paper*, Asia-Pacific Programme.
-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WB,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orld Trade Organization. 2019, *World Trade Report 2019*, WTO.
Zhou, M. 2020, *Trial and Error*, Nikkei Asian Review, Feb.10-16.

〈인터넷 사이트〉

國家信息中心 https://www.yidaiyilu.gov.cn/info/iList.jsp?cat_id=10037
中国一帶一路網 <https://eng.yidaiyilu.gov.cn/>